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영길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국민 독서 운동 제창

책은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곤 했다고 한다. 책은 만인의 것임을 나름대로 실천한 셈이다. 독재자 무솔리니 또한 대단한 독서가로 알려져 있다.

굳이 유명인의 예화를 들지 않더라도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책을 가까이 하면 현인과 벗이 될 수 있다는 독서상우(讀書尙友)란 말이 이를 증거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목耕(自耕)의 즐거움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지이 삼매를 누릴 겨를이 없는 것 같다. 학생들도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가까이 한다. 강의가 없는 빈 시간에 야외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낭만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불석권(手不釋卷)이 아니라 수불석기(手不釋機)에 빠져 있다.

OECD에 가입한 주요 국가의 연평균 독서율이 76.5%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책을 읽지 않는 나라에 속한다. 작년에 가구당 책을 사는 데 쓴 비용은 1만 6000원 꼴로 5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

하고 있다. 그나마 참고서나 학습 교재를 사는데 쓴 돈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일반 교양서적은 거의 구매를 하지 않은 모양이다. 미국 주간지 '뉴욕커'에 1인당 책 읽는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한국이 소개되었다고 하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그 나라는 결국 퇴락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나라의 품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국가의 독서 경쟁력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범국민적 책 읽기 운동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책 읽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다. 다문화 가정이나 임산부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독서지도사를 파견하거나, 노인들이 읽기에 편하도록 활자가 큰 책을 제작 보급하는 일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영국처럼 지역의 모든 아기에게 책을 선물해 주는 북스타트(Book Start) 운동을 펼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방의 작은 도시 충남 논산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논산독서협회(회장 김영란)의 정기 독서 모임은 눈여겨볼 만하다. '책 읽는 도시! 품격 있는 논산'을 구호로 내걸고 2006년부터 매달 두 권씩 책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초청 인사를 모셔서 강연을 듣는다고 한다. 논산시도 공간이 필요하다면 시장실이라도 내어 주겠다며 이 독서 모임의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범국민적 독서 운동을 촉발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국가별 연평균 독서율이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독서율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각종 지수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서하지 않는 국가와 국민은 지식 기반 경쟁 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세계는 바야흐로 '독서 혁명' 중이다. 독서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독서흥국(讀書興國)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종교칼럼



양홍 서광교회 협동목사

통일은 갈망이다

결권을 행사하여 나라를 되찾기도 하고 나라를 세운 것도 보아왔다. 또한 분열됐던 민족이 하나 되고 분단됐던 국토가 통일되는 것도 보았다.

월남이 월맹에게 흡수되면서 베트남이 통일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우리 한국인들이 적화통일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반공 깃발을 더 날렸었다. 독일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가 하나 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도 우리 휴전선도 무너지는 날이 다가올 줄 알고 흥분했었다.

“ 지금은 통일되지 못한 나라가 우리 한국뿐이다. 언제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 ”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 우리들에게 요즘 들리는 말은 어불라하다. “느슨한 통일” 말도 나왔다. 즉 급하게 서둘러 말고 서서히 하자는 말이다. 양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쉬운 것부터 교류하면서 통일의 길을 터야 한다는 것 같다. 앞질러 말하면 통일은 안 되는 일이니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듯 연방제 같은 형태를 갖고 서로 지켜보자는 일찍부터 주장해 왔던 누구(?)의 구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통일사상이 변해지는데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그런 수밖에 없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이유로 독일의 교훈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 “독일이 합하고 보니 행복하지 못하다”, “독일은 서독의 경제가 동독을 흡수하고

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한국 경제야...” 이런 말이 우리들의 입에서 자주 나온다.

40년간 공산주의로 세뇌됐던 동독의 생활양식이 자본주의 자유세계에서 살아온 서독의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서독인들에게는 부담이 늘고 동독인들에게는 경쟁을 감내 못하는 부담으로 해서 동독을 후회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통일을 그들은 후회하는가? 후회한다면 그것이 바른 생각인가? 아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통일은 근본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통독의 현실이 무슨 통일의 교과서인가? 느슨한 통일이 무엇인가?

나는 쇠망지에 쓰러지고 부서져 가루가 된 베를린 장벽 자리에 신작로가 있는 것도 보았다. 독일은 돌이 아니다. 하나다. 2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의 국토를 쪼개고 수도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랬던 독일이 하나로 뭉쳤고 경제 최강국이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돼야 한다. 느슨하게 생각하기는 영구히 돌이 될는지 모른다. 해방 후 연합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신타통치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언어 있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신타이 무엇이니? 우리는 결사코 반대하지 않았던가? 해방 후 8년간도

혼란도 있었다. 그러나 신타를 반대한 것만은 잘못이다. 우리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영국은 한 때 인도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간디를 달랬다. 간디는 결연히 반대했다. “독립이면 독립이지 자치가 무어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 우리 민족은 무수한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을 견디며 버려 낸 민족이 아니던가!

우리는 결코 두 나라가 될 수 없는 민족이요, 국토요, 역사다. 3천년, 3천만(7천만), 3천리, 한 언어, 한 피, 그야말로 한 국토 한 민족이다.

이런 우리가 통일을 못한다면 천추에 남을 민족 죄인이 될 것이고 이런 우리가 통일된 한국을 세계에 보여 주지 못한다면 민족의 이 치부를 무엇으로 싸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통일돼야 하는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모른다. 그러나 보았다.” 그렇게 대답하겠다. 공산주의가 소멸되고 연방이 해체되고 민족들이 독립을 하고 장벽이 무너지고 독재자가 쫓겨나고 철권자가 처형되는 역사를 들었고 현장을 보았다.

6·25 제6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통일을 갈망한다. 그것이 방법이요 그것이 전부일 것이니...

社說

이젠 대학 강단에서까지 5·18 왜곡이러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참뜻을 곡해하거나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왜곡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대학에서 교수가 5·18을 비하하는 일이 벌어졌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는 최근 건국대 교양 과목 강의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5·18을 왜곡했다며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문제의 교수는 수업 중 '5·18에 북한이 개입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과 연관된 노래다', '지만 원 씨 책을 읽어야 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수업에 참석한 학생이 제보한 것으로 단체들은 녹취로 확인했다고 한다.

더욱이 문제의 교수는 상습적으로 5·18을 헐뜯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의 책을 학생들에게 추천했다고 하니 교수의 기본 소양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지만원 씨는 열도당도

않은 주장으로 5·18을 깎아내려 보수진영에서조차 제재 놓은 인사인데도 어떤 근거로 그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5·18 단체들은 대학 측에 해당 교수의 사과와 사퇴, 총장 명의의 해명을 요구하고 교수의 책임 있는 해명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내용이 왜곡된 것 같다는 입장이고, 대학 측은 사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은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시간이다. 따라서 이번 교수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서도 보호받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5·18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큰 교수가 비뚤어진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은 또 다른 왜곡을 불러올 수 있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발언이 사실이라면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동료에 의한 여교사 성폭력 그렇게 많았던가

광주·전남 지역 여교사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참담하다. 게다가 가해자 대부분이 학교 관리자, 동료 교사라는 점에서 교단의 성윤리와 성의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초·중·고 여교사 17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여교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0.7%가 "교직 생활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 등 넓은 의미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광주·전남 지역(광주 24명·전남 200명 설문 참여도 제외)은 아니어서 성희롱과 성추행 경험 비율은 각각 62.5%와 63.5%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여교사들이 꼽은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 '술 따르거나 마시기 강요', '유혹업소에서 출강요' 등이었다. 놀라운 것은 학교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할 책임자들이

주요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광주 여교사들은 '학교 관리자'(73.3%)와 '동료 교사'(53.5%), 전남 지역 여교사들은 '동료 교사'(59.5%), '학교 관리자'(58.7%), '학교에서 직책을 맡은 학부모'(18.3%), '학교 및 지역단체의 직책을 맡은 주민'(7.9%) 등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여교사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절하는 교장 등 관리자들의 독단적 학교 운영을 차단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단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운영주의를 과감히 폐기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킨 학교 관계자들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절실하다. 또한 여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고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소득의 분배를 둘러싼 마찰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숲에서 사냥한 짐승고기든, 땅에서 거둬들인 농작물이든, 대가없이 받아들인 돈이든 관계없이, '특정 집단이나 사회 내부에서 생겨난 이익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에는 항상 이견(異見)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의 권력자·집단·국가들이 소득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해 갈등을 겪고 결국엔 멸망으로 치달은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보았다.

주거복지·일자리 알선 상담도 총 529건이나 이루어진 가운데 주민센터 등 연계 29건, 긴급복지 9건, 수급자 선정 4건 등 총 46건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곧바로 사금융을 노크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센터의 문턱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센터의 기능을 홍보하여 단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고금리 사채 등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근한 벗이 되는 센터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침체로 가족이나 어려운 때에 센터가 시민들의 행편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는데 보탬이 되는 작은 플랫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재무월립 상담전화 062-613-6700 ~2.

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물가가 치솟고 일자리는 없어져 가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생계유지 문제에 부딪혔다"며 "특히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10명 중 8명이 반대표를 던져 기본소득 제공은 '없던 일'이 됐지만, 10명 중 2명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여론은 만만치 않다. 특히 찬성론자들이 논리 제시한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라는 지적은 '찬반'을 떠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힘이 있었다. (누구나 기

공정한 경제

본소득이 생김으로써 '생계에 대한 위협이 사용자 노동자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더 이상 쓰일 수 없게 되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는 것이 요지다.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경제구조'는 아마도 꿈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급수저가 발효하고 흡수저가 좌절하는 시대에 '기본소득 제공'이야말로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지는 우리 소시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도 모른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기고

‘채무힐링상담센터’서 희망 찾으세요



지영배 광주시 민생경제과장

시급한 병원비도 마련하고 기존 고금리 사채도 저금리로 전환하여 연간이자 부담이 115만원이나 줄어 든 48만원이면 해결된다는 사실에 집으로 돌아가는 A씨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2. 남구 백운동에서 10여년 동안 보습학원을 운영해 온 B(40·여)씨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원생수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보니 학원 형편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었다.

#3. 북구에 거주하며 일정한 소득없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아들을 대신하여 손녀를 양육하며 어렵게 살아오던 C(54·여)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1월 센터를 방문하였다. 센터 복지상담원은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C씨의 손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였다. 추후로 의료 및 주

거도 동시에 지원받게 된 C씨는 이내 한숨을 돌리며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12년 6월 15일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신고와 금융상담 업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청 1층 민원실에 동지들 틈 센터가 거둔 수많은 실적 중의 일부이다.

현재 센터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금융, 주거복지, 취업정보 등에 관한 원스톱 상담을 통한 시민밀착형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화상담 위주로 신청자들이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밝혀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등 어려움도 많았고, 신용조회부터 대출심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불편함이 많았으나, 지금은 자산관리공사, 광주신용보증재단 전산망과 연계하여 빠르고 쉽게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소 4주년을 맞은 금년 6월 기준으로 센터의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서민금융 상담은 채무상담 1571건, 채무조정 701건

등 총 2272건으로 이중 바뀌드림론 94건,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20건, 행복기금 17건, 햇살론 13건 등 총 196건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주거복지·일자리 알선 상담도 총 529건이나 이루어진 가운데 주민센터 등 연계 29건, 긴급복지 9건, 수급자 선정 4건 등 총 46건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진 바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센터의 문턱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센터의 기능을 홍보하여 단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고금리 사채 등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근한 벗이 되는 센터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침체로 가족이나 어려운 때에 센터가 시민들의 행편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는데 보탬이 되는 작은 플랫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재무월립 상담전화 062-613-6700 ~2.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